

# 남남갈등을 넘어

이 한 우 (조선일보 논설위원)

## ◆ 논문 요약 ◆

“이 무렵 서독 언론들은 갑자기 발견 이라도 한 듯 동독의 상황이 모두 최상은 아니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언론들의 그같은 보도태도가 잘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의 많은 신문 방송들은 바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호네커를 이웃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가 용기를 내어 동독의 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한다거나 베를린

장벽과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철의 장막에 대해 항의할 경우 그는 곧 냉전주의자로 비난을 받았다. 그런 언론들이 이제는 개혁을 철저히 반대하는 옛 스탈린주의자들이 동베를린의 권력 핵심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나왔다.”(헬무트 콜,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해냄) 89~90쪽)

## I. 남남갈등의 배경

남남갈등(南南葛藤)이란 용어는 엄밀한 학술용어는 아니고 언론들이 북한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골깊은 대립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이 남남갈등이란 단어의 등장 자체는 광의의 개혁-진보-좌파 연대 세력의 득세와 연결되어 있다. 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정권이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으로 바뀔 때마다 단계별로 이들 세력의 합법화 공간이 확장되어 왔고 특히 김대중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좌우세력의 역학관계는 균형 내지 좌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때 좌쪽으로 기운다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나 사회주의 성향이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극히 느슨한 형태로 전통적인 좌파는 물론, 각종 소외세력, 민족주의 세력, 청년층 등이 연합을 하면서 집권가

능한 세력을 이루었고 김대중정권에 이어 노무현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런 과정을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남북간의 이념적 분단으로 인해 온건한 좌파마저 정치참여의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던 우리로서는 강한 이념을 내세운 좌파정당의 집권은 불가능하지만 변형된 형태로나마 유럽에서와 같은 좌파집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정당성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마땅한 룰이나 규범 혹은 역사적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참으로 많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빚어야 했다. 그런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이다.

사실 선진국의 보수당과 사민당 정도의 이념정당화가 되어 있었다면 길거리에서 충돌하는 남남갈등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서로 다른 이념들의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은 소위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충돌을 의미하는 남남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부터다. 남남갈등이라는 이 저널리즘적 용어는 대략 3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 후 지난 3년동안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는 각종 행사 등에서 북한을 보는 관점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충돌을 빚어왔고 언론들은 그 때마다 그것을 ‘남남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앞으로 해소되는 방향보다는 계속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II. 북한, 미국, 민족, 국가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미 남남갈등을 빚어낼 요소가 오래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후 좌우대립으로 날을 지쌌다 그것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건국노선의 투쟁이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자유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 들어섰다. 미래의 국가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실패하고 각각의 이념에 따른 국가가 들어선 것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 전쟁을 통한 공산통일이 목표였다. 이런 기도는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됐다 수백만명이 사망한 동족상잔은 민족 간의 적대감을 극대화시켰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절대적 도움 하에 빈곤에서 탈출했고 북한은 폐쇄성으로 인해 기아국가로 전락했다 게다가 세습국가라고 하는 현대판 왕조국가가 들어섰다.

대한민국에는 산업화가 진행됐지만 동시에 오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가 지배했고 그에 반발하는 세력 또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들은 기존, 기득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주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주류에는 고위관료, 군부, 경제계, 기성언론, 집권당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 주류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민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북한과의 접근을 시도했다 자기나라의 야당보다 북한을 더 가까이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이런 맥락 속에 살펴야 한다 또한 미국을 한국 주류사회에 대한 막후의 지원자로 간주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간략하지만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이같은 인식을 고려할 때 남남갈등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북한, 미국, 민족, 국가의 4대 계기가 자리하고 있다.

## 1. 북한

지금이야 상황이 달려져 그런 경우가 없지만 한 때 남북관계를 동서독과 비교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같은 비교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는 동서독 간에는 우리와 같은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냉전적 사고’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 표출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위선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태도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동시에 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난 전후세대에게 전쟁 직후의 적대감만을 전수하려 했던 기성세대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 양비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

대는 기성세대의 그같은 반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기성세대는 체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체험 전달에 그쳐야지 그에 관한 해석까지 강요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경우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이같은 세대분열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런 가운데 80년대 중반부터 주사파니 NL이니 하면서 친북반미를 구호로 하는 세력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사회운동 분야로 확산되더니 마침내 2000년대 들어서는 정치권에까지 진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 요소는 김대중정부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남한정치화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적어도 김대중정부식의 북한의 남한정치화는 과도했으며 불순했다고 본다. 대북불법송금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은 그것이 가져올 폐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서는 선의쪽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박관념을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시킨 것이다. 사물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 대상이 굳이 북한이 아니어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사물이건 복잡다양한 양면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에도 맞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면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매도하면서 억지사고를 강요하는 햇볕정책은 반이성적인 면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나은 체제일 수 없다 이 점은 소위 친북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이제와서는 수긍하는 편이다. 그런, 보고 배울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북한에 대해 모든 비판을 유보한 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민족의 길이라고 하는 한총련 수준의 주장이 이제는 주요 정책담당자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체제를 일방적 잣대로 해서 북한체제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낡은 반공적 사고 또한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설사 우리가 여러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진 대화상대로서의 측면 또한 앞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중간지점, 즉 위협요인으로서의 북한과 대화상대로서의 북한을

더불어 보려는 시도야말로 현단계 대다수 국민들이 갖는 건전하고도 상식적인 대북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김대중정부때 정점에 이르렀고 여전히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일방적인 북한옹호론이 한국정치 깊숙이 들어와 사안을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드는가? 무엇보다 거기에는 막강한 선동의 잠재력이 들어 있고 정치인들로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의 허위의식 또한 크게 작용한다. ‘민족’, ‘주체’ 앞에 당당한 반박을 하기 어려운 한반도의 현실이 그들의 허위의식을 부추긴다.

스스로 진보와 개혁, 평화, 민주세력임을 내세우는 그들의 북한정당화 내지 옹호는 실은 치명적인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모순조차 모순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무딘 역사감각과 진정한 역사발전과 진보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 있다.

## 2. 미 국

두 번째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주 복잡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미국은 그저 초강대국으로서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현상은 실은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체제에도 깊숙이 들어 있는 내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류하고 짚어보는 일은 본고의 고찰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겠다.

다만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도에서 나타나는 미국에 대한 양대입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실은 자주파와 동맹파는 김대중정부때부터 충돌해온 민족공조파와 한미공조파, 궁극적으로는 국내 좌파와 우파가 미국을 놓고 양분된 결과이다.

용어만 놓고 본다면 한미관계의 단절까지 주저하지 않는 극단적인 자주파에서 북한을 여전히 적대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극단적인 동맹파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내에서의 자주파와

동맹과, 넓게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자주파와 동맹파는 다행스럽게도 그같은 양극단은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내의 자주파는 설사 좀 나이브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한미 관계 단절, 동맹파기를 내세우는 자주파는 아니다. 동시에 동맹과 또한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 온건한 동맹파이다. 자주파를 대변한다는 NSC의 주요 인사들이나 동맹파를 대표하는 국방, 외무 장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쪽이 개개의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긴, 이같은 양쪽의 온건파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양극단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온건자주파와 온건동맹파의 논의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양대 이념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 3. 민족

우리에게 민족은 피를 끊게 만드는 가슴벅찬 용어임에 틀림없다. 이 점은 특히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시련을 당해온 민족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힘없는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주변국가들로부터 갖는 침략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느낌은 각별하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위에서 살펴본 북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결부되어 논의되는 한 그것은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때의 민족이란 체제에 우선하는 한반도 안의 단일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민족은 현재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도 널리 퍼져 있다. 또 그 중에 다수,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인들은 이미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다.

원칙적으로야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사실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지나치게 단일민족으로만 된 국가에 집착하는 예외적인 경우

인지 모른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민족에 집착할수록 국가에 대한 개념도 협소해진다.

그리고 ‘민족이 체제에 우선한다’는 말도 극히 정치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북한의 미국배제론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다만 이같은 감상적 민족주의가 일반인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게 갖는 파괴력으로 인해 민족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사실상의 미국배제론의 위험성이 은폐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미국은 외세이다. 이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자극제이기도 했고 여전히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모델이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주고받아야 할 나라이다.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에 적합한 관점인듯이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4. 국 가

끝으로 국가의 문제를 짚어보자. 실은 위에서 말한 북한 미국 민족의 요인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와 현재를 형성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리는 ‘북한’의 같은 ‘민족’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배적인 도움을 받으며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피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빠트리는 요인이 하나있다. ‘민주공화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결의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좌파성향의 우리 현대사 개설서들은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며 20년 가까이 진행된 역사 뒤집어보기, 거꾸로 보기 등의 결과로 지금은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에 의해 민주공화정이 이식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우선 사실(史實)과도 맞지 않다.

민주공화정은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구한말 개화의 선각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신국가 건설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 점은 3.1운동 후에 국내외에 세워진 대여섯개의 임시정부 안에서도 확인된다. 왕정복고를 염

두에 둔 임시정부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좌우간에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제때부터 민족지도자들은 해방된 후의 국가는 당연히 민주공화정으로 간다는 암묵의 합의가 폭넓게 존재했다.

흔히들 일제의 식민사관을 이야기하며 일본사학자들이 ‘한국은 스스로 역사를 개척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비하해 왔다고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땅의 아마추어 좌파 역사평론가들이야말로 각종 뒤집기와 거꾸로 보기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를 스스로 개척할 능력이 없는 국민’인 양 매도해 왔다. 그들의 수법은 간단하다. 어느 나라건 국가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오를 과장해서 마치 우리 현대사에는 오로지 질곡과 억압만이 존재했던 것인 양 그려내는 것이다. 이 점은 식민사관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면 성취와 불행이 뒤섞여 있다. 성취는 성취대로, 불행은 불행으로 볼 일이다. 성취만으로 불행을 가리려 해서도 안되고 불행만으로 성취를 덮어서도 안된다 아마도 이런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의 현대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다면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어떤 나라도 성취하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 현대사, 대한민국사에 대한 이같은 주체적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북한 미국 민족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가능해진다. 북한추종, 미국반대, 민족만능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이 땅의 일부 좌파들의 결정적인 결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과 왜곡에 있다. 그것은 곧바로 그들의 비현실적인 주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확인된다.

### Ⅲ. 평화개혁세력의 허구성

언제부턴가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평화개혁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주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

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은연중에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반평화, 전쟁세력이자 반개혁, 수구세력으로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얼핏 보면 ‘평화’를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괜찮은 접근법처럼 보인다. 평화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정치인이 절대적 평화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지구상에 그 어떤 정치세력도 평화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평화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놓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인이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서 평화를 내세우고 싶으면 그는 당장 정치를 그만두고 시민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훨씬 낫다.

평화를 들고 나올 경우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실 평화의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무수한 해석이 가능한 유동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자칭 평화개혁세력이 말하는 평화가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남한과 북한이 일체의 무력사용을 배제한 채 대화에 의해서만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가고 미국이 통일에 반대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거론할 때이다. 과연 대화만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또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공갈협박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대남노선을 견지할 때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론할까?

문제는 경우를 달리할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북한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최근 일부에서 보도가 되듯 중국에 의한 군사점령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대적 평화론자들의 처방이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사태들을 예상할 때이다.

즉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상가능한 제반의 경우들을 상정해가며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이지 스스로를 평화세력 운운하며 상황대처능력을 포기해버리는 패배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평화는 누구나 바라는 목표이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평화만을 일방

적으로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전쟁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을 평화개혁세력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남남갈등의 한 ‘남’을 형성하는 평화개혁세력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름으로써 실은 다른 한 ‘남’과의 대화루트를 스스로 차단한다. 자신들만이 평화세력이라면 다른 쪽은 전쟁추구 세력이 되는데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의 대화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전쟁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나라당이 종종 민주당을 ‘노동당 이종대’라고 불렀다가 비판을 받듯,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전쟁세력’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적어도 같은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에게 대해 최소한의 예의마저 팽개치는 것이고, 남남갈등의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IV. 논의공간의 저질화

남남갈등은 비단 북한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근본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즉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친미와 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광복절 때 상징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한쪽의 우파집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인공기를 불태우는 행사가 있었고 다른 한쪽의 좌파집회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사를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평균적인 한국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한국의 우파가 성조기를 흔들 필요까지는 없으며 그렇다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태 또한 비난받기 쉽상이다. 실제로 표면화되는 남남갈등은 이처럼 극단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길거리 투쟁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에서도 이같은 극단적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수준의 이야기만 해도 ‘빨갱이’라는 섬뜩한 용어로 사람을 매도하던 분위기가 있었다. 물론 이제는 지나간 먼 옛날의 이야기다. 그런데 지

난 10여년간 좌파진영이 단계적으로 합법화되고 각 분야에서 활동이 강화되면서 국가니 미국이니 기업이니 하는 단어만 입에 올려도 ‘수구’, ‘보수’, ‘반동’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릇된 풍조가 얼마전부터 만연되고 있다. 사실 빨갱이니 보수반동이니 하는 용어들은 해방직후 좌우익 행동대원들에게나 적합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특히 좌파진영의 학자들까지 이런 용어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수준의 어휘사용은 사실 좌우대립이랄까 남남갈등이라는 용어조차 과분하다. 그것은 실은 이념대립이 아니라 저질 정치패거리 싸움의 용어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용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은 좌우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논쟁의 장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 땅의 이념적 논의수준이 이처럼 저질화되고 있는데 반해 몇 년전부터 이념갈등은 국내문제보다는 국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의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세계화 문제이다. 사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즉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는 국내의 좌파진영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어쩌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마땅한 이슈를 찾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했던 전세계 좌파세력에게 이 문제는 덜 이념적이면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제3세계 농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안이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대목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IMF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는 그같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폭넓게 확산되었고 사실 2002년의 오노사건이나 여중생사건은 그같은 잠재적인 반감에 불을 붙이는 촉매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 다음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분명 그같은 대립적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한 사회의 다양성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각자 화해할 수 없는 진영을 이루어 진지전의 형태로, 즉 논쟁이 아니라 단절적인 사상전쟁의 형태로 표출되는 한 그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사회의 분열일 뿐이다.

국제적인 문제는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달려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주장에 앞서 기존의 논의사항과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즉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자칫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특히 방송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토론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제쳐둔 채 일단 친미나 반미나로 가르는 길거리 수준의 쟁론이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아무리 방송이 시청을 때문에 찬반을 극단적으로 가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이익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게까지 그같은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 방송 제작자들의 문제의식과 사안을 보는 수준에 의구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히 찬반이라는 형식에 얽매어 도저히 함께 이야기하기 곤란한 수준의 출연자까지 등장시켜 흥미위주로 토론을 이끌어가는 데서 정점에 이른다

## V. 남남갈등의 위험성

남남갈등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감정적 골을 깊게 해 사회통합을 해치는 국내적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남갈등은 기본적으로 북한-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마치 우리 주변에는 북한과 미국만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협요인은 실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온 중국의 위협성은 무서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마치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요인이 북한이나 미국인 것처럼 상정하는 남남갈등은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의 위협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동안 남남갈등에 매몰되어 한국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둘러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급성장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런데도 중일문제보다 북미문제가 현안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북핵

이라는 사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시야에 넣을 경우 미국배제론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그들의 맹목적인 지지자들과는 다른 안목을 보여주었다.

그에게도 북미문제가 제1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중국 일본 요인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소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이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여기에 진보적이면서도 전략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탁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창을 닫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개혁세력은 늘 북한이나 반미에 집착한다. 그것이 국내 진보세력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처지를 애써 무시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상황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대한민국이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전혀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으로 가득찬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인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기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 있어도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의 문제를 생각할 때 미국의 역할은 분명 우리에게서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쪽이 많다. 이것은 사실 해방후 이승만 전대통령이 구현한 것이긴 하지만 실은 구한말 개화지식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영토적 야심이 덜한 먼곳이 강대국을 끌어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는 체제의 동일성을 뛰어넘는 문제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북한도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형편이지만 김일성이 살아있고 소련이 건재할 때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대한민국과는 안보환경이 달랐던 그 당시 현실에서 북한으로서는 소련과 중국에 대해 등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독자적인 공간을 만드는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

이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며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생존전략이다. 반면 중국 일본 등은 도외시한 채 북한이나 미국이나 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남남갈등의 논의구조는 주변상황을 평면화시키고 우선순위를 흔들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존전략에 대한 오판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평화개혁세력의 위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 VI. 황장엽과 송두율의 경우

황장엽과 송두율은 남남갈등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한 사람은 북한체제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동시에 그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민주체제만이 민족의 살길임을 확신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물 정치인이다. 또 한 사람은 남한에서 성장해 독일로 유학갔다가 그곳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학술활동을 전개하다가 최근 대한민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고 있는 학자이다.

우리 지식인 사회가 두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은 정반대다. 황장엽씨에 대해서는 뭔가 미심쩍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송두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적이다. 그만큼 우리 지식인 사회의 좌편향이 심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적과 그들의 이론작업을 검토해볼 기회가 있었다.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적과 저술을 읽어보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동시에 그들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송두율씨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듯 그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가 볼 때 황장엽씨의 경우 철학적 이해가 깊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 자신 스스로 헤겔철학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밝힐 정도이다. 또 그 자신이 주장하듯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보기는 어렵

고 주체철학을 이론화하는 집체작업 때 학술행정적으로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남쪽에 내려와 쓴 책은 황장엽이라는 인물의 사상적 행적을 살피는데는 도움이 될 망정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그리고 자본주의에 관한 원론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어 별도의 이론적 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반면 송두율씨의 경우 독일에서 사회철학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깊이를 갖추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일학계에서조차 선두권에 이를 수준은 아니고 다만 국내의 사회철학 전공자들과 비교할 때 앞서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세계적 석학’운운하면서 그의 문제많은 행적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유치한 것이다

송씨는 분명 일정 시기 북한체제가 남한체제보다 낫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건 남한의 지식인이나 학생을 상대로 북한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내려고 자신이 공부한 서양의 지식을 동원했다 북한이 마치 포스트모던 국가의 맹아를 보인다고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나 내재적 접근법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이해적 접근을 남한에 확산시킨 것 등은 그 일부에 속한다. 어떻게 보면 애써 배운 서양의 사회사상을 전혀 그와 어울리지 않는 북한을 찬양하는데 활용하려한 맹목의 지식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황장엽씨나 송두율씨의 행적과 사상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 분석을 하기보다는 상투적인 반복과 친북 논란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 남남갈등으로 인해 황씨나 송씨의 본령은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주장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것이다.

과연 북한의 붕괴를 주장하는 황씨는 ‘냉전적 인물’이고, 경계인을 자처하며 북쪽과 연계를 가지며 친북활동을 해온 위선자 송씨는 ‘탈냉전적 인물’이고 ‘분단의 희생자’인가? 누가 역사를 직시하며 용기있게 사는 사람인가? 편을 가르기에 앞서 공정한 잣대로 두 사람을 재보기를 바란다

## VII. 전문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남갈등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다. 그것은 국내정치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의견을 낼 때는 왜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국내외의 정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보자. 역시 좌파진영은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용병이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순간 자신이 후세인의 철권통치를 정당화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이라크전쟁에 얽혀 있는 복잡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극히 감각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결과이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조금만 고려해도 대한민국 차원은 물론,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실은 한국군의 파병은 적극 고려될 측면이 있다. 다시, 이런 차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리틀 제국주의'에 동참하는가, 즉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식민전쟁에 참여하는 부도덕을 저질러서는 되는 가라는 반박도 있다. 이 또한 감상적이면서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이 친미성향의 정권을 이라크에 세우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일제와 같은 식민지를 이라크에 건설하겠다고 본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용병 운운하는 것은 주로 비전문가의 언급인데 반해 제국주의 동참론은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는 도덕주의의 시각으로 국제정치를 보려는 소산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이라크 파병논란의 공통의 기반은 어느 쪽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의견은 제각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같은 공통의

기반을 갖고서 논란이 진행되어야만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터져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상당 부분 수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전문가 토론이다. 신문이나 방송이 스스로 어떤 입장을 미리 정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갖춘 여러 다른 입장의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된다면 어쭙잖게 상대방을 빨갱이니 수구니 반동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일 없이 깊이있는 논쟁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조금씩 재조정하게 되면서 공론도 양극이 아니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이나 방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은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되 공론의 장은 다양하게 보장하는 새로운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보수’언론이니 ‘진보’언론이니 하는 이분법은 나름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난에 국한되어야지 모든 지면, 모든 프로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모두 한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VIII. 남남갈등을 넘어

필자는 남남갈등을 없애는 것이 갈등극복의 방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또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 또 어느 사회건 그런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서로간의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현재의 양상은 문제라고 본다. 결국 대안은 대화의 틀을 만들고 그런 틀 안에서 쟁론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 제안으로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첫째, 입장별 토론보다는 사안별 토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TV토론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사안별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게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각종 토론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뻔히 방향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로 보수적 인사 한

두명을 출연시켜 바보만들기식 토론을 진행하곤 했다. 그것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이다.

누가 봐도 양측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인사들을 초빙해 속된 말로 ‘박터지게’ 싸우는 토론을 기획해야 한다. 단순한 말재주나 상대방 모욕주기를 일삼는 패널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인사들이 토론을 벌일 때 말 그대로 여론선도의 기능도 하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다.

둘째, 양극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진영의 내부에서 비판이 나와야 한다. 극우적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파쪽이 앞장서서 비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극좌적 주장에 대해서는 좌파가 비판해야 효과적이다. 늘 그렇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 극우가 극좌를, 극좌가 극우를 도와주는 양상인 것이다. 이같은 극과 극의 상호공존 전략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진영 내부의 자기비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얼마전 인터넷 진보언론 ‘프레시안’의 박인규대표는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박 대표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입장이 나 논조만을 문제삼는 비평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가 보수나 진보라고 해서 그같은 성향을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끝없는 소모전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극히 당연한 이 말이 의미있게 들리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우리 학계와 언론계에는 이같은 성향비판만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칭 민주세력이나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쪽에서 이런 성향비판이 많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되지 왜 성향비판을 일삼는 것일까? 가장 손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굳이 상대방의 논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장 쉽게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쉽게 자신이 어느 진영에 속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표의 제안은 특히 진보쪽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 공론장의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